

# 지방자치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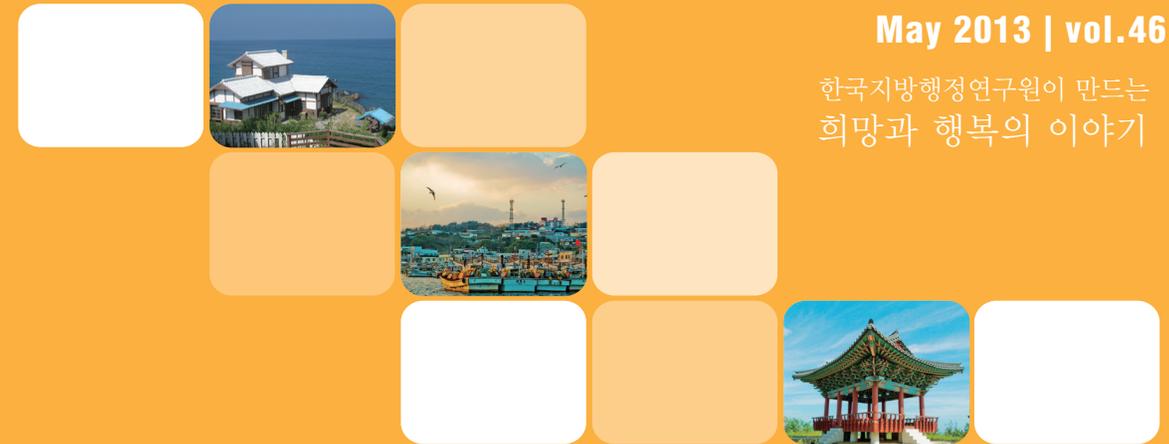
## NEWS&ISSUE

# 5

May 2013 | vol.4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드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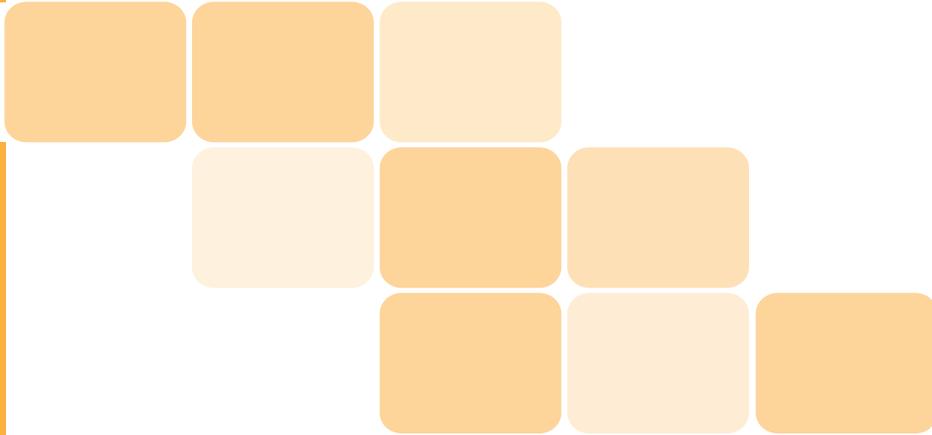


### 이달의 issue

#### 국정현안 과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대응방안

-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생활안전연구센터의 정책지원 방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생활안전센터 활약에 기대하며
- 국정현안과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대응
- 예산집행을 위한 공공투자관리제도
- 국민행복 창출의 수단,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센터의 역할

# CONTENTS



## | 이달의 issue

국정현안과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대응방안

- 4 ● 권두언  
연구원의 효율적인 센터 운영방향
- 7 ● 생활안전연구센터  
「안전한 대한민국」건설을 위한 생활안전연구센터의 정책지원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생활안전센터 활약에 기대하며
- 14 ● 재정분석연구센터  
국정현안과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대응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공공투자관리제도



# 5

May 2013 Vol. 4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NEWS&ISSUE 통권 제46호  
 발행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승중  
 편집인 / 지방자치 NEWS&ISSUE  
 연락처 / T 02·3488·7300 / F 02·3488·7309  
 디자인 / (주)소프트하우스  
 본 지방자치 NEWS&ISSUE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 지역공동체연구센터 20  
국민행복 창출의 수단,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센터의 역할
- 연구원 동정 26

# 연구원의 효율적인 센터 운영방향

최영출

(충북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 행정대학원장)



이번에 이승중 연구원장이 부임하면서 연구원내에 새로운 부서로서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투자관리센터 및 지역공동체연구센터가 설치되었다. 생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게 커지고 있고, 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사업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및 지역공동체에 바탕을 둔 주민참여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새로운 국가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시도는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과도 부합하며 이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면에서도 센터설립을 통한 연구 활동의 강화노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위상으로 볼 때 필요성과 타당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 세 개의 센터설립과 관련하여, 개별센터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두어야 할 주요 연구내용과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 1. 센터의 주요 연구 기대내용

### 1) 생활안전연구센터

크게 볼 때,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및 대응체계의 체계적 구축방안이 주요 연구내용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자연재해 측면에서

보면, 예방적 재난방재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축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내의 재난취약요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재난취약 시설, 가구, 지역, 재래시장 등에 대한 상세 분류별 집중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자연재해에 대한 지능형 대응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진 및 해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한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또, 홍수, 폭설 등에 대한 재난전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도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위적 재난의 경우에는 원전관련 시설 등 재난안전시설의 지역입지와 관련한 각종 갈등을 어떻게 사전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도 필요하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간 및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주민들 간의 재난과 관련하여 복잡한 조직들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통합화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력과 예산을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재편하며, 거버넌스 차원에서 각 행위자들의 역량 강화가 가능해 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에서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도시화, 노령화에 따라 농촌지역사회가 급격히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에서 적용가능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대표체계의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도 필요하다. 현재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원화되어있는 지역사회 주민대표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반사회를 활성화하여 반장이 통·리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통리장이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이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대표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가령, 주민자치위원회에 소규모개발사업 결정권, 자치회관 운영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차원의 주민교육 활성화방안도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참여의 실질적 장이 지역사회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주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지역사회차원의 평생교육네트워크의 정비 및 주민교육프로그램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

권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

3) 재정투자사업관리센터

국가적 차원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 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단위 사업의 효율화 방안이나 이를 심사하는 제도들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각종 투·융자심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연구가 내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센터의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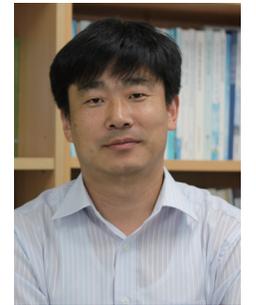
이상에서는 3개 센터의 주요 연구내용 및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센터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센터의 연구인력으로 모든 중요한 연구과제 들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국내외 연구인력 및 연구기관들을 네트워킹하고 이 들 연구주체들의 연구 관심사항 및 아웃풋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느슨한 형태의 연구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3개 센터의 활동분야와 관련된 부처들의 사업평가 기능들을 연구원의 센터들이 수행하는 체제도 필요하다. 가령, 재정투자사업관리센터의 경우, KDI가 수행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기능을 분담하여, 일정한 규모이하나 특정 성격을 가진 자치단체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원의 센터들이 각 해당 부처의 사업평가 기능들을 담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생활안전연구센터의 정책지원 방향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생활안전연구센터 소장)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새정부가 국민행복의 정부 3.0으로 출범하면서 국민을 위한 맞춤형복지의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환경을 굳건히 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생활안전에 관하여 새정부는 국정과제를 9개 정도로 정하였고, 특히 4대 사회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목표를 세워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사회, 먹을거리를 철저히 관리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이 제로가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안전행정부 주도로 ‘안전정책’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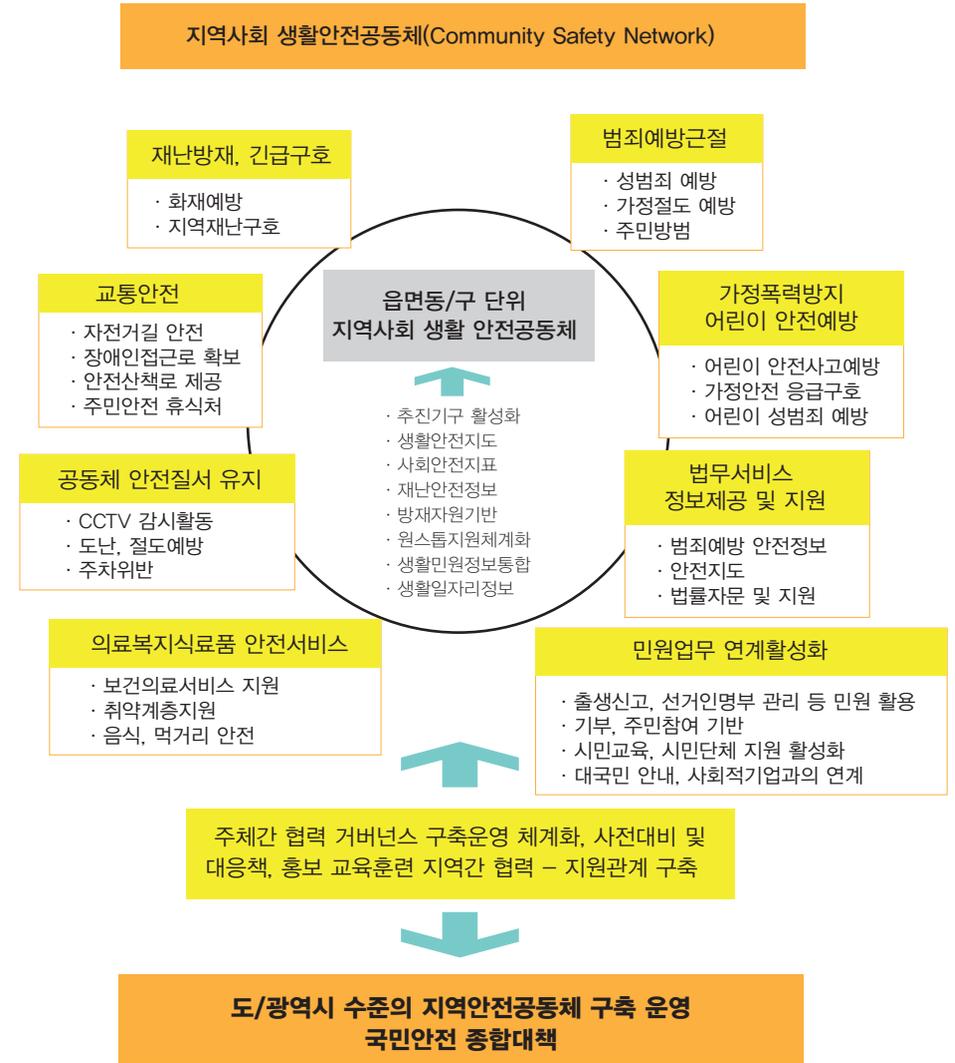
사실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고들의 형태를 보면, 주로 생활 주변공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잦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12년 발생한 사고 유형을 볼 때, 가정에서 59%, 다중이용 시설에서 17.9%, 교통 또는 보행상 발생하는 사고들이 9.6% 등으로 생활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안전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처리는 주민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의 위협요인들을 잘 파악해서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WHO(국제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 모델을

도입해서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서 지역공동체 안전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행해 왔다. 특히 주민생활과 가장 가까운 기초단위에서는 오래 전부터 마을단위의 안전협의회 등이 구성·운영되면서 지역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 왔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읍면동 단위에서 생활안전에 관련한 각종 봉사단체들이 여러 일반인들과 주변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정부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마을단위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지역을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확산하여 안전문화진흥 활동을 넓혀가도록 하면서 동시에 참여의식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참여효과가 발휘되도록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커뮤니티 실천기반인 민·관의 협력파트너십으로서의 ‘지역안전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범정부적 측면의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안전행 정부는 이미 5월 초에 25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안전정책 조정회의’ 를 개최해서, 안전사회 확립 및 <공동체의 안전> 구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4대 사회악의 근절 등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아 협력적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국립재난방재연구원도 그 명칭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바꿔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과거 재난방재연구센터를 재조직화하여 유연한 ‘학습조직’ 형태로서 생활안전연구센터로 구축하고 정부의 정책과 안전행정부의 최우선 목표들을 지원하는데 온 힘을 쏟고자 일찍이 3월 초부터 생활안전을 비롯한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구지원을 시작해 왔다. 정부의 안전정책은 주로 자연재해와 재난안전 및 산업안전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근린생활의 안전을 위한 주민복지, 사고안전, 질서유지, 폭력예방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운영체제나 추진체제가 완비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생활안전연구센터는, 새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 4대악 중심의 원천적 근절 및 예방 정책의 추진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공동체’ (community safety)라는 통합적인 주민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공통 모듈을 연구·개발하여 정부정책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림 1> 지역사회 생활안전 공동체 기반



‘생활안전 공동체’가 제공하고자 하는 최상의 목표는 자연, 기후변화와 사회경제 등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범죄, 무질서, 안전사고, 재난 등의 원천적인 원인들을 제거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재난안전 발생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빠르고 강인한 사회적 복원력 (Resilience)의 역량을 갖춘 지역공동체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

권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

권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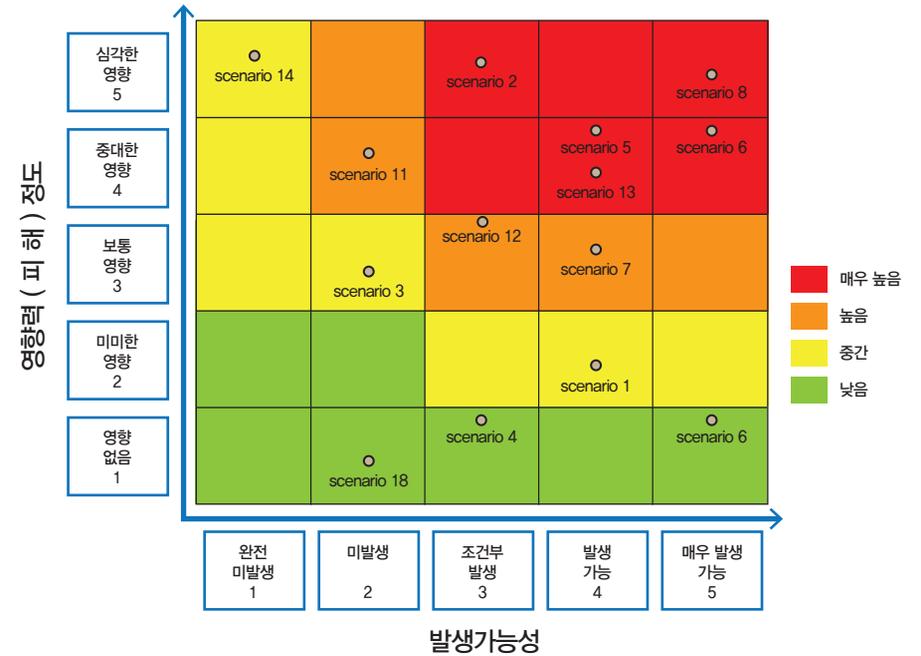
연구원 동정

한 생활안전 정책은 모든 시민이 사회적, 경제적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범죄와 무질서, 생활안전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위협이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 최상의 (사회경제적) 수혜를 받아 지속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연계된 정책을 말한다. 우리 생활안전연구센터의 2013년 최상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생활안전 정책을 뒷받침해서 재난 및 사고발생 가능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적인 행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러한 것들이 지역공동체와 각 시민 개개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안전 공동체’의 모습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고, 마을의 생활안전 공동체가 시군 단위로 확대되고, 다시 이것이 시도 단위의 광역적 생활안전 공동체로 발전해서 정부의 ‘국민안전종합 대책’의 안전관리 기본틀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연구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정책의 하나는 바로 지역사회,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전위험평가를 통해서 미리 대비하는 총체적 재난안전관리 및 대응체계라고 할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대·내외 환경변화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인위적 사고 발생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국기반체계 보호 등 중앙부처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심으로 예방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방재자원 활용’, ‘재난정보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집행계획 등이 제대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안전사고로부터의 피해저감 방법, 위기에 대비 대응 및 복구하는 방안 등과 관련해 과거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론을 동원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생활안전연구센터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또 다른 방안을 깊이 있게 강구하고 있다. 즉, 현대 모든 국가는 시민에게 항상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위험들이 소리없이 다가오는 가운데 실제로 미리 미리 처방책을 만들어 두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이러한 위험들은 눈덩이 효과와 같이 갈수록 그 위험도가 커져가 중구급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악영향을 초래한다. 위험의 성격과 내용, 발생가능성 등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하여 생활안전연구센터는 OECD의 주요 선진국들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국가재난위험평가제도’ (National

<그림 2> 국가재난위험평가 매트릭스(도표)



Disaster Assessment System)에 대해서 OECD 연구팀들과 협력연구를 통해서 체계적인 <재난 위험평가 방법론> 등을 연구하여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 대안 제시를 하고자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재난위험평가제도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재난안전 등 위험요인들에 대하여 핵심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만든 위험요인 데이터 들을 수집·정리하여 공통기준을 근거로 다양한 위험들을 비교하는 방식의 정부통합적 접근법(a whole-of-government approach)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재난평가란 재난(안전)위험 정도에 관해서 그 재난을 초래한 사건의 영향력 정도(the impact of an event)를 위험발생 빈도의 가능성(its likelihood of occurrence)과 연계한 계량적 수치(quantitative value)로 표시하여 이를 연관관계로 보여주는 매트릭스 도표에 표시하여 국민 모두가 쉽게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만들고, 안전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한 목적으로 측정된 수치의 결과를 시각화한 <그림 2>의 매트릭스 도표가 바로 위험발생 빈도의 상대적 가능성(relative likelihood)과 위험(발생)의 상대적 영향력(relative impact)을 연계된 사사분면 표에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매트릭스 표는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최고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요구되는 자원 활용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함께 한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생활안전센터 활약에 기대하며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머스로우(A.H.Maslow)는 그의 저서 '가능성의 심리학'에서 욕구단계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결핍욕구)와 성장 욕구로 나눈다. 즉, 이를 세분하면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1)생리 욕구-식욕·성욕·수면욕 등, (2)안전 욕구-개체 생존의 안전 보장감, (3)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사회 귀속 욕구, (4)자아존중 욕구-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5)자아실현의 욕구-최고의 인간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 등이다. 이 중에서 다섯 번째의 욕구를 제외한 (1)·(2)·(3)·(4)의 욕구는 기본적 욕구로서 저차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있는 욕구라고 하고, 다섯 번째의 자기실현의 욕구 즉, 성장욕구만은 여러 가지 덕목(眞·善·美·약동·개성·완전·필연·완성·정의·질서·풍부·즐거움·무애(無碍)·자기충실·의미 추구 등)이 있으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 욕구들이 모두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계층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즉, 단계별로 욕구충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처한 환경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으면서 가장 필요한 욕구가 두각될 수도 있다.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욕구는 머스로우(A.H.Maslow)의 (2)안전 욕구-개체 생존의 안전 보장감-안전에 대한 욕구인 것 같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이나 AI전염병, 구제역, 일본의 3.11 동일본대지진, 911 테러, 태안 기름유출사건, 문지마식 살인, 자살, 가깝게는 보스톤

마라톤의 불특정다수에 대한 테러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안보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같이, 안전의 개념도 포괄적 위기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 재난의 특징, 조건과 결과는 현재의 재난과는 다르다고 예측할 수 있다. 국가적 경계를 넘어 초국가적 혹은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초국경화의 특성을 가진다. 재난은 물리적 피해나 치명적인 인과관계보다는 '집단적 스트레스'라는 새로운 특성을 지니게 된다. 재난의 정치화로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난의 정도에 따라 그 재난은 정권을 위협할 수도 있고 아무런 영향 없이 종결될 수도 있다(임승빈 외, 2012). 최근의 재난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종재난과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구분되지 않는 '복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는 위기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초대형 중대재난에 대한 예측과 사전대비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위협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사회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재난안전 분야의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대형 재난의 특징은 특정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범지역 혹은 범국가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재난의 특성은 복합재난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라는 점은 누구든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등 최근의 재난사례를 보면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종재난과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구분되지 않는 '복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는 위기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재난은 복합적일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부처별·지역별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즉, 재난에 관한 상황별 법적인 근거와 책임부서가 달라 대응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체제가 분산·다원화되어 시·도 및 시·군·구의 업무 담당자들의 재난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한다. 동일본 대지진 위기관리에 대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적 관계를 연구해온 대표적 싱크탱크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생활안전연구센터를 발족시켰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우수한 연구진을 갖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생활안전연구센터에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나 다른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생활안전에 관한 연구를 리뷰하고 이를 융합화시켜 정책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역커뮤니티를 통한 생활안전도를 향상시키는 연구 및 정책제언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

권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

# 국정현안과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대응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최근 부동산 경기의 위축, 국세 감면, 부동산 관련세 감면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은 점점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 지역주민의 서비스 욕구 고도화에 따르는 재정지출 요인의 증대 등 지출요인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수입, 지출요인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한 관리체계는 통제라고 하는 도식적 개념을 떠나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와 관련된 다양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그중 하나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의 강화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대한 관리는 획기적인 재정 증대가 제약되어 있는 현실에서 재정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출구임에는 분명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구비되어 있으나, 그중 핵심은 투·융자심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여과장치로,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재무적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경제성이 낮은 투자의 억제와 투자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투자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완비 및 시행 전 사전보완, 투자사업 결정을 위한 자료의 체계적 분석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투·융자심사제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장애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 제도의 핵심과정중 하나인 사전타당성 조사과정은 투·융자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융자심사시 검토하므로써 재정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동 조사는 의뢰방식, 조사대상, 수행기관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성 조사는 해당 사업추진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甲과 乙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甲의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곧 타당성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타당성제도의 부실운영으로 연계된다. 둘째, 현행 규정상의 타당성 조사의 대상은 '500억원 초과 투·융자사업, 100억원 이상 공공청사 건축사업' 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500억원 미만 일반사업, 건축비 100억원 미만 건축사업은 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재정력 등에 따라서는 500억 미만 사업이라 할지라도 당해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대상의 범위 규정에 의해 사전 검증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현행 규정에서는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행정 또는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기관'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수행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으로 인해 연구원, 대학연구소, 엔지니어링업체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중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관도 있을 수 있으며, 한 기관의 조사결과가 타당성이 없을 경우 다른 기관에 재의뢰할 수 있는 여지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신정부에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의 강화를 위해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사업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행과정에서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정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또 하나의 관건은 사업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 이를 뒷받침할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 회계학회에서는 ① 전담기구의 설치여건 및 기관의 지원능력 ② 기관과 전담기구의 정책 부합성

권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

권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

③ 전문적 능력 및 전문성 발휘 가능성 ④ 기관의 추진의지 및 기관의 이해도 ⑤ 공공성 및 객관성 유지 가능성 등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적절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사방법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어야 하지만 공공성 및 객관성의 유지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분석기법이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정책연구기관으로 2005년부터 타당성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부터는 '재정투자사업관리센터'를 신설하고, 투·용자 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실적 축적 및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로 29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정책연구 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그간의 차별화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정부 지방재정분야의 국정 과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공공투자관리제도



김형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투자평가실장)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관리 없이 추진한다면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정되거나 집행되지 못하여 재정이 낭비되고,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일련의 공공투자관리제도이다.

사전·중간·사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공투자평가체계 가운데 사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되었으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계기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확보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면서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그리고 중기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되며,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

물론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제도화 된 1999년 이전에도 타당성조사는 실시되었다. 그러나 평가주체가 다양하고 평가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조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수요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해 온 기존 타당성조사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 예산 배정 및 집행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예산부처의 감독 아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평가의 객관성, 일관성, 정확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여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부처의 관리 하에, 1971년 설립 이래 한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기능해 온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 및 관련 연구업무를 총괄 수행해 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전적인 성격을 갖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타당성재조사 및 수요예측재조사를 도입하였고, 최근 사후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심층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이러한 평가와 예산배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사전·중간·사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공투자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공사 등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사례는 세계은행(World Bank)을 비롯한 유수한 국제기관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 기능 강화 노력과 함께 최근 지방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다소 형식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투융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평가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것인데,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기능이 강화되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투자관행을 억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권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

첫째, 사전적인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사전·중간·사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공투자평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가체계와 예산배정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평가를 전담할 전담기구를 설립함과 동시에 평가와 관련된 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전담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명확한 역할 분담 및 독립된 전담기구 없이는 평가의 일관성,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며, 전담기구 역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담기구가 설립된다는 전제 하에 전담기구의 인력 보장에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평가의 수월성을 확보하지 못 한다면 어느 누구도 평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국가의 전반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최근 지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전담기구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증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례를 참고하여 타당성조사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지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국민행복 창출의 수단, 지역공동체 활성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소장)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14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발전분야에서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지역공동체가 주목받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그동안 우리나라가 달성한 ‘경제가치’, ‘기술가치’를 뛰어넘어, 이제는 ‘사회가치’, 특히 지역사회의 공동체 가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달성한 ‘빛나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은 부끄러울 정도이다. 2012년 한국의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는 OECD 34개 국가 가운데 26위로 꼴찌 수준이며, 자살율은 10만명당 31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가 해체되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애정, 연대 등이 사라지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고독사, 갈등, 인간소외 등 갖가지 사회 병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또, 그간의 지역발전에 대한 반성과 대안적 발전의 필요도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은 ‘사람의 행복’보다는 ‘장소의 번영’에 초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압축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지역자체의 ‘총량적 성장’에 주목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은 우리나라의 질적 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새로운 수단이 필요한 형편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충남, 전북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수원, 안산, 진안, 완주, 강릉, 홍천 등 다양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해서 살기 좋고 따뜻한 행복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국가가 중심이 된 지역발전과 대비되게 지역중심, 특히 지역공동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이를테면 과거 국가에서 지역으로 하향적으로 집행되던 지역개발 방식 대신, 상향적이거나 분권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에 비견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업중심, 탁상중심, 결과중심의 접근 대신, 사람중심, 현장중심, 과정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 공동체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고, 현장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아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방식의 혁신도 필요하다. 정부는 철저히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매개자원, 행정과 주민을 잇는 중간지원의 매개조직, 공동체 활성화 매개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 내용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보육, 일자리, 주거환경, 안전, 문화 등으로 다양하듯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협업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제를 슬기롭게 선정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적인 역량과 다양한 단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의 능력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국정과제는 지역의 발전의 현장의 주민과 괴리되지 않고, 그 성과가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도 체계적인 정책의 준비 및 추진이 필요하다. 소액의 재원지원은 물론이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권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

권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

권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

매뉴얼을 작성·보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정책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3년 초에 「지역공동체 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 공동체 형성, 복원, 육성을 통해 주민의 체감적인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나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산파역이자 산실’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전문 연구 및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① 공동체 기초조사를 포함한 연구개발, ② 중앙 및 지자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및 매뉴얼 개발 등 정책개발,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④ 우수 지역공동체의 국내외 홍보 및 전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센터의 역할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권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

근래 들어 지역공동체의 회복 또는 활성화가 지역개발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지역 공동체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수다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에서는 급격한 도시개발과 산업화로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되고 갈등과 소외가 나타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축소·소멸이 진행되는 한편, 다문화가정과 귀농·귀촌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존 주민과 이주민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농어촌공동체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만큼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다. 진안, 완주, 담양, 안산, 수원, 부천 등의 기초자치단체와 서울, 광주, 충남 등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기 다른 이름의 지역공동체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공동체 단위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거나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공동체경제의 구현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 한편, 지역

발전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의 전반적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 단계로서 작은 사례들은 다수 있지만 큰 그림은 그리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경험의 공유, 학습, 협력을 통한 창조적인 발전경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의 가치회복과 “신뢰의 관계망”의 재구축을 포함하는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해 생산, 소비, 생활, 문화, 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리더의 육성과 주민 역량의 강화, 공동체 문화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삶의 방식의 정착·확산, 사회적 경제 또는 공동체 경제 육성 등을 통해 함께 나누고 함께 소비하는 협력적 모듬살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민관협력체계의 구축과 현장 밀착형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지역공동체 주민과 전문가 집단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공동체 특성에 맞는 발전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경험과 노하우 교환의 장소와 다양한 국내외 관련 사례에 대한 정보 발신 거점이 필요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방식으로서의 이론적·기법적인 진보 및 체계화를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의 역할이 우선적이고도 긴급하게 요구되는 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공동체연구센터’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01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일 시 / 2013. 5. 23(목) 10:30 ~ 12: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 세미나 개최

주 제 / 박근혜정부 지방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략  
일 시 / 2013. 5. 21(화) 14:00 ~ 18: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신문



권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

권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수원 업무협약식 체결



일 시 / 2013. 5. 20(월) 14:00  
장 소 / 지방행정연수원 회의실

### 제2차 아젠다 워크숍 개최

주 제 / 새정부 국정과제의 운영 방향  
강 연 / 박동훈 대통령실 행정자치 비서관  
일 시 / 2013. 5. 20(월) 10:30 ~ 12: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 안전행정부-OECD 국가재난위험평가 워크숍 개최

주 제 / 국가재난위험평가제도(National Disaster Risk Assessment System)  
일 시 / 2013. 4. 30(화) 13:00 ~ 18:00  
장 소 / 광화문 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  
주 최 / 안전행정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방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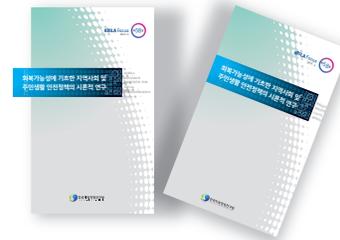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교육연수 [담당자: 김유숙/ 02-3488-7353]

- 제1기 커뮤니티 디자인 교육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5. 22 ~ 5. 24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2기 사업예산과 복식부회계 교육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5. 29 ~ 5. 31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1기 지역정책제고를 위한 지역통계활성화 교육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6. 3 ~ 6. 5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2기 주민자치센터 교육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6. 12 ~ 6. 14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1기 안전공동체와 기후변화 대응 교육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6. 19 ~ 6. 21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2기 주민참여 역량강화 교육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6. 26 ~ 6. 28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2기 지역정책제고를 위한 지역통계활성화 교육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7. 3 ~ 7. 5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1기 지역정책제고를 위한 지역통계활성화 집합교육
  - 교육장소 : 경남도청
  - 교육일시 : 2013. 6. 26 ~ 6. 28
  - 해당기관 : 경남도, 18개 시군

### 정기간행물 발간

- 지방자치 FOCUS (4월호)
  - 회복가능성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생활안전 및 통합도시 안전전략



###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 NEWS&ISSUE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

편두언

생활안전연구센터

재정분석연구센터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연구원 동정